

# ‘고군분투’ 수출 기업 돕는다… 물류비 1400만원 등 지원

〈최대〉

## 코트라, 수출 활성화 ‘3대 비상플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OTRA가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물류비와 해외 인증 취득, 해외마케팅 지원 내용을 담은 3대 비상 플랜을 추진한다.

KOTRA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shippin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직접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긴급 수요조사를 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KOTRA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해외공동물류센터 긴급 수요조사  
연말엔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지원도



유투이미지

해외공동물류센터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제품을 해외에서 보관, 포장,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수요가 매우 높아 매년 서비스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19이후 급격히 상승한

물류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로 꼽힌다. 9월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847.62포인트로, 올해 초 최고점(1월 5109.90포인트)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KOTR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운임, 선적 지연 등의 물류 애로를 겪고있다고 답해 물류 애로 관련 정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와 함께 가장 큰 수출 걸림돌로 지적되는 인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KOTRA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 증 획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등 산업별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월1일 이후 발급된 인증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CE(EU), ▲NMPA(중국), ▲ISO(품질, 환경경영시스템 등) 등 412개 해외규격인증이 지원 대상이다.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OTRA는 오는 12월 초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해

외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KOTRA는 최근 대면 비즈니스 정상화 흐름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대규모 O2O(Online to Offline)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발굴된 성약 유망 바이어를 비롯해,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소부장 산업과 그린에너지·ICT 등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바이어를 초청해 침체된 수출 활력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수출 비상 플랜의 취지”라며 “더 많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수출 걸림돌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 사회적기업 3436곳, 6만4000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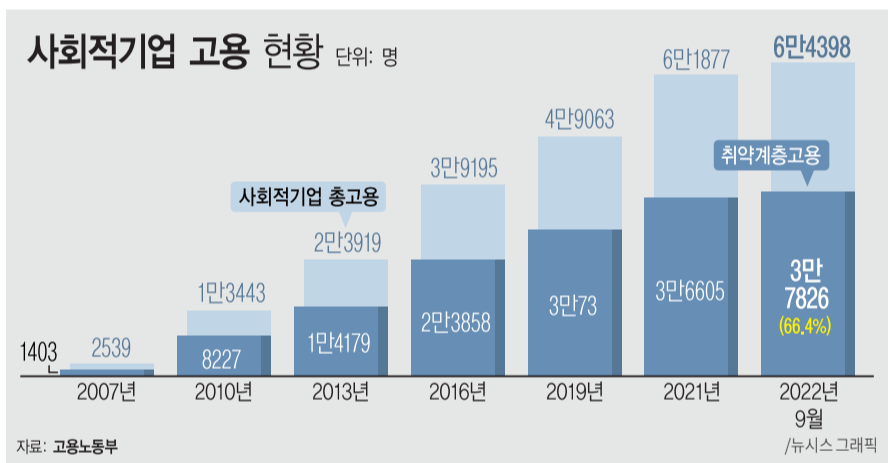
고용부, 올해 116곳 신규 인증  
58.7%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올해 116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총 3436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6만4000명, 이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만7000여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116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이 2284개(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의·혁신형 396개, 지역사회공헌형 288개, 사회적서비스제공형



263개, 일자리사회서비스혼합형 205개 순이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는 총 6만43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약계층이 3만7826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다음 심사 때부터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도입하기로 했다. SVI는 사회적가치(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환원 노력도), 경제적가치(고용·매출성과), 혁신성과 3개 측면의 14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우리 전통 한지의 발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356곳 ‘딱 걸려’

스페인산 돼지 국내산 둔갑 등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점검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모 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업체의 경우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김포시 소재 모 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며 배달앱에는 중국산 검정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도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문골 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미표시 1회 적발은 공표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 위반 시엔 공표 대상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일시적 2주택 등 중부세 합산배제 신고

64만여 명 대상… 30일까지

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올해 중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는 부부 공동 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39만명 등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 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11월 중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며 합산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 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

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중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 신고를 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장 어린 이집중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산업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구축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맞선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대한상의, 유관기관 및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이하 KEEP 30)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KEEP 30이란 국가 에너지소비의 약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산업부와 상위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 간 체결을 추진 중인 자발적 협약이다. /세종=한용수 기자